

2012년 경찰간부 행정학

01 다음 보기 중 정부실패의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공공재의 존재 | ㉡ 사적 목표의 설정 | ㉢ 외부효과의 발생 |
| ㉣ 파생적 외부효과 | ㉤ 불공평한 소득분배 | ㉥ 자연독점 |
| ㉦ 권력의 편재 | ㉧ X의 비효율 | |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 사적 목표의 설정, ㉣ 파생적 외부효과, ㉦ 권력의 편재, ㉧ X의 비효율이다.
㉠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 불공평한 소득분배, ㉥ 자연독점은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67

▶ ②

02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관료제에 의한 정부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공공부문에 접목하고자 한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행정가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비판이론적 담론주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참여의 강화를 주장하며,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불균형을 배제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
④ 포스트모더니즘은 상상, 해체, 영역파괴, 타자성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시이론, 거시정치 등을 통하여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해설 ①, ②, ③ [○]

④ [×]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거시이론과 거시정치 등을 부정하고, 개별적 상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시적 이론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54

▶ ④

03 다음 중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BTO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다.
-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 ③ BTO방식에서는 일차적으로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④ BTL방식은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민간에서 보유한 채로 민간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이다,

해설 ①, ③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며, 민간이 일차적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②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운영권과 소유권 보유 여부에 따라 BTO, BOT, BLT, 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의 투자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정부가 시설을 민간에게 임대(Lease)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57

▶ ④

04 다음 보기 중 감축관리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목표관리제의 도입 | ㉡ 사업시행의 보류 |
| ㉢ 영기준예산(ZBB)의 도입 | ㉣ 일몰법의 도입 |
| ㉤ 정책종결 | ㉥ 위원회의 설치 |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 목표관리제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설정한 목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성과지향적 관리기법으로 감축관리와 무관하다.
 ㉤ [×] 위원회의 설치는 감축관리의 방안과는 무관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40

■ 감축관리

조직·구조	행정기구의 통합·폐지에 따른 인원감축,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 단순화, 대국대과주의
인사	공무원의 신규충원의 동결·억제, 소수정예주의에 입각한 적재적소의 배치, 불필요한 인적자원의 원만한 감축
재정	예산의 효율적인 건축운영, 불필요한 사업의 배제, 구조적 전략시스템의 개발과 물자 전략적 투자, 절약기풍의 조성 • ZBB(영기준예산) :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원점에서 재평가. 예산의 점증주의 탈피 • 일몰법(sun-set law) : 존속기간(3~7년)을 설정하여 재보증을 얻지 못하는 사업의 자동 폐기·소멸시키는 제도
정책종결	주기적인 정책타당성의 재심의와 정책의 자동종결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정부기능을 외부 민영화하거나 민간조직과 내부 민영화(민간위탁)하는 방법
규제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폐지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 ②

07 정부규모팽창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 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 ㉡ 와그너 법칙 (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 되는 현상
- ㉢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들 위해 자기 부서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 ㉣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 ㉤ 보물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 해설** ㉠ [×] 전위효과는 전쟁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지출이 상향조정되어 위기상황 해소 후에도 공공지출의 크기가 감소하지 않고,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 ㉡ [○] 와그너의 법칙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적 특성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이다.
- ㉢ [○]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가설은 관료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정수준 이상으로 자기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현상이다.
- ㉣ [○]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직접적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 ㉤ [×] 보물효과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생산성 낮은 공공부문의 팽창이 사회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69~70

▶ ③

08 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등한 자유의 원리보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앞선다.
- ②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등을 위해 평등한 배분을 강조하였다.
- ③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 ④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 해설** ① [×]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평등한 자유의 원리)'이며, 기회균등의 원리는 정의의 제2원리로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보다 앞선다.
- ②, ③, ④ [○] 롤즈는 특수한 사실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88

▶ ①

09 Cobb과 Elder의 정책의제의 유형 중 체제적 의제(Systematic agenda)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연결된 것은?

- ㉠ 일반대중이 관심을 갖고(공적 관심),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공감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의제이다.
- ㉡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인식한 문제로,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적 해결을 의도 하여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이다.
- ㉢ 사회적 쟁점이 체제적 의제화되는 이슈의 확산과정에서 인식이 공유되는 관계집단이 확인 집단에서 관심집단, 관심대중, 일반대중으로 점차 확대될수록 의제화의 가능성이 확대된다.
- ㉣ 동원형 의제설정모형에서는 정부에 의해 체제적 의제가 채택 되고 난 뒤, 국민에 대한 행정 PR 등 공중의제화가 진행된다.
- ㉤ 공식의제, 정부의제, 행동의제, 기관의제 등으로 분리워지기도 한다.
- ㉥ 어떤 사회문제의 성격·해결방법에 대해 집단들 간의 견해차이가 있어 논쟁 대상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해설** ㉠ [○] 체제적의제란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이다.
 ㉡ [×] 체제적의제가 아닌 공식의제에 대한 설명이다.
 ㉢ [○]
 ㉣ [×] 동원형은 주로 정치지도자들의 지시에 의해 사회문제가 공식의제(정부의제)로 채택되고,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주도의 행정 PR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가 진행된다.
 ㉤ [×] 체제적의제는 공중의제, 토의의제, 환경의제 등으로 분리워지기도 한다.
 ㉥ [×]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지면 사회적 이슈(사회적 쟁점)가 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186~187

▶ ①

10 다음 중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신마르크스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의하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 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인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 ㉢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 ㉣ 이슈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간에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크래스너(S. Krasner)는 신베버주의에 속한다. 크래스너(S.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 [○] 다원주의자인 벤틀리와 트루만은 이익집단론에서 정책은 결국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로 인식하였으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 역할을 상정하였다.
- ㉡ [○]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정책 이해를 가지고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한다. 다만, 다른 참여자에 비해서 중요한 행위자임은 인정한다.
- ㉢ [×] 이슈네트워크는 구성원 간 관계가 매우 유동적이며 경쟁적인 관계망이다. 따라서 안정성이 낮으며,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175~182

▶ ④

11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5년 마다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특정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제2항)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동법 제6조).
- ㉣ [×]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68~270

▶ ④

12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 ④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 유추분석

개인적 유추 (personal analogies)	정책분석가 자신이 정책 관련 집단들이 처해 있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서 문제상황을 경험하고 상상해 봄으로써 문제를 파악. (예 교통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만원버스를 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함께 겪어보는 것 등)
직접적 유추 (direct analogies)	둘 이상의 문제상황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찾아 냄으로써 문제를 분석. (예 분석가가 악물중독의 문제를 구조화하는데 전염병의 통제 경험으로부터 유추)
상징적 유추 (symbolic analogies)	다루고자 하는 문제상황과 어떤 상징적 대용물 사이의 유사한 관계를 찾아내어 문제를 분석. (예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책의 순환적 결정과정을 자동온도 조절장치에 비교하는 것)
환상적 유추 (fantastic analogies)	정책분석가들이 문제상황과 어떤 가상적인 상황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고 자유롭게 상상해 보는 것. (예 안보정책의 경우, 분석가들이 가상적인 핵공격 상태를 전제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

▶ ③

15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음에는 익명성이 요구되나 정책안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공연한 입장에서 토론이 허용된다,
- ②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 ④ 정책델파이는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으나 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며, 주관적이고 질적인 예측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류과정을 전개한다.

- 해설** ① [○] 정책델파이는 예측의 초기단계에만 익명으로 응답하는 선택적 익명성이 특징이다.
 ②, ④ [○]
 ③ [×] 정책델파이는 의견차이를 부각시키는 양극화된(이원화된)통계처리를 한다. 중위값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다.

■ 전통적 델파이기법 vs 정책델파이기법

구 분	전통적 델파이기법	정책델파이기법
응답자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식견 있는 창도자
익명성	완전한 익명성 (직접대면접촉의 상호토론 ×)	선택적 익명성 (논쟁이 표면화된 후 상호토론)
통계처리	중위값, 평균치 등 중시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 의	합의 도출(의견일치를 유도)	구조화된 갈등(유도된 의견대립)
토 론	토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06

▶ ③

16 기획의 그레삼 법칙의 원인인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 ① 환경의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능력의 한계 - 목표의 유형성
- ② 시간·비용·노력의 부족 - 외부 환경요소의 증시
- ③ 과두제의 철칙 - 관례·선례의 경시
- ④ 기획담당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성향 - 일상적 집행업무의 중시

해설 ①, ②, ③ [×]

④ [○] 기획의 그레삼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법칙으로 일상적 진부한 업무와 쇠신적 기획업무의 두 가지 업무가 있는 경우 기획담당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성향으로 전자가 후자를 구축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78

▶ ④

1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 Hackman & Oldham은 직무특성이론에서 다섯 가지 직무특성 중에서 직무정체성과 자율성이 동기부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 ㉡ E. H. Schein에 의하면 인간은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로서 개인별로 복잡성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 ㉢ D. Lawless는 무정부상태와 같은 방임형 관리를 강조하였다.
- ㉣ V. H. Vroom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 이외에도 직무수행의 능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들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잠재적 동기지수 공식[잠재적 동기지수 = (기술다양성 + 직무정체성 + 직무중요성)/3 × 자율성 × 환류]에 따르면, 자율성과 환류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 [○] 샤인은 현대인을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을 지닌 복잡인으로 묘사하였다. 샤인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가 계층별로 배열되어 있지만 때와 장소 등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조직생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욕구를 배울 수도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역할에 따라 욕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욕구체계와 능력, 담당업무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전략이 적합함을 제시하였다.

㉢ [×] 무정부상태와 같은 방임형 관리를 강조한 것은 룬트스테트(Lundstaedt)이다.

㉣ [○] 브룸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 직무수행의 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을 들고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48~351

▶ ③

18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이나 형평성도 적절히 고려한다.
- ② 공공분야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 ③ 조직은 경제 활동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이다.
- ④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에 해당된다.

해설 ① [×], ④ [○] 거래비용이론은 대리인 이론과 함께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으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디자인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② [○] 거래비용이론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민간위탁, 계약제 등에 응용되고 있다.

③ [○] 거래비용이론에서 조직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라고 본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34, 조직 p.325

▶ ①

19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조직의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② 공공부문의 비시장성과 비경쟁성은 TQM의 필요성 인식을 약화시킨다.
-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꾀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생산성 제고와 국민에 대한 대응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해설 ① [×] 조직의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MBO에 대한 설명이다. MBO는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통해 조직의 목표설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② [○] 정부부문의 경우 정부업무의 품질을 측정하기 어렵고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를 확인하거나 한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으며, 정부부문의 비시장성·비경쟁성은 TQM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TQM을 정부부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 TQM은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부문에 도입할 경우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④ [○] TQM은 고객(정부부문에 있어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응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75~377

▶ ①

20 행정연구에서 혼돈이론(Chaos theory)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 ② 행정조직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 세력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이다.
- ③ 행정조직은 혼돈상황을 적절히 회피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④ 행정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한다.

해설 ①, ② [○] 행정조직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환경적 세력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체제이며, 행정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 ③ [×] 혼돈이론에서는 혼돈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이해하고 긍정적 활용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 ④ [○] 혼돈이론은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전제한다. 즉, 혼돈상황에서 자기조직화를 통해 체제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28

▶ ③

21 매트릭스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계층제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계선과 참모의 역할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 ②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조직으로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다.
- ③ 대사관조직이나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은 매트릭스 구조에 해당한다.
- ④ 조정이 용이하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설 ①, ④ [×]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계층제 구조인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구조로 기능구조의 이원적 권한체계로 인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간 충돌가능성이 있고, 권한과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② [×] 수평적이고 평면적인 조직으로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니는 것은 팀구조(수평구조), 네트워크 구조 등이 해당한다.

③ [○] 대사관조직이나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은 매트릭스 구조에 해당한다. 대사관은 구성원이 수직적으로는 기능구조로 형성되어 대사의 지휘를 받지만, 수평적으로는 사업부서인 각 행정부처와 연결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289~291

▶ ③

22 아담스(J. S. 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에 대한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소보상 보다는 과대보상을 할 것을 주장한다.
- ② 처우의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산출을 준거인의 투입·산출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된다.
- ③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원은 투입과 산출의 수준과 방향에 변화를 주어 공정한 지각이 되도록 한다.
- ④ 동기부여에 있어서 조직원의 지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해설 ① [×], ② [○], ③ [○], ④ [○] Adams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서로 비교하는 습성이 있다는데 주목하고, 개인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공헌도(투입)와 보상(산출)을 준거인물과 비교하여 불형평성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즉, 과다보상(자신의 보상 > 준거인물의 보상)된 경우나 과소보상(자신의 보상 < 준거인물의 보상)된 경우 이러한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의 동기가 유발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50

▶ ①

23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갈등의 유형 중에서 생산적 갈등이란 조직의 팀워크와 단결을 희생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유형이다.
- ②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이다.
- ③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풍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 ④ 갈등은 조직의 현상유지적 균형을 교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소전략을 강구해야만 한다.

- 해설** ① [×] 생산적 갈등은 구성원의 능동적 행동을 촉진시키고, 창조와 성장을 이끌며, 팀워크와 단결을 촉진시키는 등 조직변동의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 ② [○]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이란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접촉을 통해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③ [×]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수평적 갈등(수직적 갈등×)에 관한 설명이다.
- ④ [×] 갈등은 복잡한 동태적 현상이므로, 갈등의 상황적 조건에 맞게 해소전략과 조성전략을 취사선택하는 갈등관리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즉 건설적(생산적) 갈등은 조성하고, 파괴적(부정적) 갈등은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63~365

▶ ②

24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기되었다.
- ② 적극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 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 ④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해설** ① [○]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의 약화를 보완하고 민주적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 ② [×]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 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는 구성적·소극적 대표성에 대한 설명이다. 행동적·적극적 대표성이란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집단에 비례적으로 구성된 관료들이 출신 집단이나 계층을 적극 대변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 ③ [○]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았으나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임명직 관료집단을 어떻게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되었다.
- ④ [○] 대표관료제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조하는 실적주의와 충돌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442

▶ ②

2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 ② 집중화경향(central tendency)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상대 평가를 반영 하는 강제 배분법이다.
- ③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④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 해설** ① [×]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점수를 주는 오차는 유사성 오차이다. 상동적 오차는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이다.
- ② [○] 집중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 ③ [○] 체크리스트법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그 목록에 단순히 가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④ [○] 도표식평정척도법은 i)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곤란, ii) 등급 비교기준이 불명확, iii) 평정이 임의적임, iv) 연쇄화·집중화·관대화의 오차발생 등의 한계가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480~485

▶ ①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무원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노조설립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 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 ③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 ④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해설** ① [×]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② [×]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동법 제7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7조 제3항).
- ③ [×]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동법 제12조).
- ④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512~514

▶ ④

27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전문화된 행정영역으로 이해된다.
- ②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사행정원리의 탐색을 강조한다.
- ③ 개방체제적·가치갈등적 성격을 중시한다.
- ④ 종합학문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한다.

해설 ① [○] 오늘날 인사행정은 하나의 전문화된 행정영역으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 분야이다.

- ② [×] 현대 인사행정은 복잡한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성 및 신속성을 강조하므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사행정원리보다도 상황에 맞는 가변적 인사행정을 강조한다.
- ③ [○] 인사행정체제를 둘러싼 가치갈등의 심화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치갈등의 조정 및 개방체제적 성격이 증시된다.
- ④ [○] 현대 인사행정은 응용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430

► ②

2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직위분류제는 미국의 인간관계론의 영향을 받아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원칙을 구현하였다.
- ㉡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 ㉢ 중앙과 지방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성과와 경쟁을 강조한다.
-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인사체제를 개방하기 때문에 행정의 비분절화 현상을 야기한다.
- ㉤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융통성이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X] 계급사회의 전통이 없는 미국에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직위분류제를 도입하였다.

- ㉔ [○] 직렬이란 직무 종류가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다.
- ㉕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과 특정직인 외무공무원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등이 포함된다.
- ㉖ [×] 행정의 비분절화 현상이란 부처간 단절을 극복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으로 고위고무원단 제도는 과거의 1~3급을 폐지하고 실·국장급 관료들을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폭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비분절화 현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인사체제를 개방하기 때문에×)
- ㉗ [×]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인사배치의 융통성이 높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443~445, 450~456

▶ ①

32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본회의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2000년 국회법의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되었다.
- ④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해설 ① [×] 우리나라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그래서 '위원회 중심주의'로 지칭된다.
 ②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③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지만 상설위원회이다(상임위원회×).
 ④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예산과 법률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규범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구속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 없고,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542, 543, 593~595

▶ ②

33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완전성의 원칙 - 순계예산, 기금, 특별회계
- ② 단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 ③ 한정성의 원칙 - 예비비, 계속비, 목적세
- ④ 사전의 결의 원칙 -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해설 ① [×] 특별회계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 특별회계는 통일성·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② [○]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는 추가결정예산, 특별회계, 기금이 있다.
 ③ [×] 목적세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다.
 ④ [×] 계속비는 사전의결을 거치므로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551

▶ ②

34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급격한 희소성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 ② 완화된 희소성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 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이다.
- ③ 만성적 희소성하에서 예산은 주로 지출통계보다는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 ④ 총체적 희소성하에서는 반복적 답습예산에 의존한다.

해설 ① [×]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총체적 희소성의 상황을 의미한다. 급성 희소성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사업비용의 점증적 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를 의미한다.

- ② [○] 완화된 회소성의 상태는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의 정상비용 및 업무량 증가분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 ③ [○] 만성적 회소성의 상태는 신규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예산은 주로 지출통제보다는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 ④ [○] 총체적 회소성 상태에서는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피적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재정적 운명으로 불가능한 곤경상태를 해결하기 바라며 반복적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584

▶ ①

35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의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 ② 기관별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 ③ 감가상각과 미지급금 등의 인식이 어렵다.
- ④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해설** ① [×] 발생주의 방식은 자산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반영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자의적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이러한 문제발생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② [○], ④ [×]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는 관계없이 실질적 수익과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등을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실질적 수익과 비용의 측정이 가능한 발생주의를 도입할 경우 기관별 성과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 ③ [×] 발생주의회계는 감가상각, 대손상각, 제품보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 등을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611

▶ ②

36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및 민원인의 비용절감
- ② 국민 참여 증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 ③ 대고객 관계의 인간화 촉진
- ④ 행정의 생산성 향상

- 해설** ① [○] 원스톱·논스톱 행정의 구현, 근린정부 구현 등을 통한 고객위주의 행정으로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공급 및 민원인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 ② [○]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행정부문의 정부공간을 공개·확대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파트너십을 증진시킬 수 있다(민주형 전자정부).
- ③ [×] 전자정보의 구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의 침해가능성, 대고객 관계의 비인간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 ④ [○] 정부 내의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보화사회와 행정 p.659

▶ ③

37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과 사전심사권이 없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해설** ① [○]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 ②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위원회는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③ [○]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권이 없다. 또한 사전심사권이 없고 사후심사에 그친다.
- ④ [×]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개혁 p.683, 684

▶ ④

38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개혁은 공공적 상황에서의 개혁으로 포괄적 연관성, 시간적 단절성을 지닌다.
- ② 행정개혁은 장기적·지속적 속성은 있지만 동태성은 없다.
- ③ 행정개혁에서 기술적 접근법이란 행정정보화, 새로운 분석기법의 활용, 의사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있다.
- ④ 행정개혁은 인위적·의식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한다.

- 해설** ① [×] 행정개혁은 시간적 단절성이 아닌 지속성(개혁은 장기적 학습과정)을 갖는다.
- ② [×], ③ [×], ④ [○] 행정개혁은 목표지향성, 동태성, 포괄적 연관성, 저항의 수반, 공공적 상황 등의 특성을 갖는다.

■ 행정개혁의 특성

목표지향성	행정개혁은 의식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추구 → 계획적·유도적임.
동태성·행동지향성	미래를 향한 과정상의 동태성, 개혁주체의 의식적 행동의 실현
포괄적 연관성	개방체제적 → 개혁의 문제를 둘러싼 요인들의 연관적 영향관계를 감안
지속성	행정 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 상존 → 개혁은 장기적 학습과정
저항 수반	인위적으로 현상유지를 무너뜨리는 행동 → 저항을 수반
공공적 상황	공공적·정치적 상황에서 추진 → 공공의 감시와 통제, 법적·정치적 제약이 큼.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개혁 p.686

▶ ④

